2001년 국정지표
민주 인권국가 구현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 구축
중산층과 서민보호
남북 평화협력 실현

2001년 3월 12일(월)
주간 / 비매품

국정신문

발행인 오홍근 편집인 고석만 발행처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우)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1 / 전화 (02)3450-2255(편집) 3450-2276(구독) FAX 3450-2259

인천국제공항 29일 문열어

"동북아의 문" 항공사 유치 순조

여객 연간 2400만명 처리능력

아시아 최대규모의 공항으로 동북아 허브(Hub) 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29일 역사적인 개항식을 갖고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연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있던 우리나라가 경의선의 연결과 함께 대륙으로의 길을 열어 동아시아·태평양 시대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기사 4·5면)

개항을 보름 여 앞둔 현재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공항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주요 경쟁공항들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세계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개항은 단순히 김포·김해·제주에 이은 또 하나의 국제공항이라는 차원을 넘는 의미를 갖는다.

인천공항은 세계 각 국이 급증하는 항공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공항 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간사이, 홍콩 첵랍콕, 중국 푸동공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항이다.

공항 개항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수요를 능동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고용창출 내년 8만여명

공항 건설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도 중요한 소득으로 꼽을 수 있다.

외환위기가 닥쳐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된 공사는 건설경기 회복에 이은 경제위기 극복에도 일조했으며,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중 하나라는 대형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건설산업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관련 연구기관 등은 공항의 건설과 운영에 연계되는 생산유발효과가 2010년까지 700조원에 달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올해 4만3000명, 내년 8만5000명, 2010년 25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항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무엇보다 동북아 경쟁공항과 허브공항 경쟁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도전장을 냈다는 데 있다.

간사이·첵랍콕·푸동공항 등이 앞다퉈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 개항하는 인천공항은 외신이 전하는 대로 경쟁공항이 바짝 긴장할 정도로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의 커다란 변수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미 공항운영의 관건이 될 항공사 유치에서 인천공항은 김포의 46개를 넘어 50개 이상의 항공사와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공사비 절감에 따른 낮은 공항사용료와 최신 설비로 인한 획기적인 서비스 정책 등은 다른 공항들에 비해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항 관계자들은 보름 남은 개항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시설용량을 적기에 확보한다면 허브공항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24시간 운영으로 연간 17만회의 항공기 운항, 2700만 명의 여객과 17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게 될 매머드급의 인천공항은 재무구조의 취약성 및 공항 접근수단의 한계 등 다소의 약점을 안고 출범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와 공항공사는 수하물처리시스템 등의 보완으로 개항 전 완벽한 준비를 갖추는 한편, 공항 접근수단에 대한 비상대책 및 중장기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초기 공항의 정상적 기능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행시설 국제공인 받아

개항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철도 및 제2연육교 건설, 관세자유지역 설치 등이 이뤄지면 인천공항은 꿈의 동북아 물류전진기지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공항은 각종 비행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연방 항공청의 비행점검에 합격해 국제공인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시험운영에 참여한 항공사와 외부전문가들은 공항운영시스템의 안정화에 따라 성공적인 개항을 확신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개항준비 차질없나

설비 완벽…200m만 보여도 이착륙

수하물 처리능력 향상 용량 증설
진입고속도 넓어 정체되는 일 없어

배후단지 건설 내년 2000세대 입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언론 등 일각에서 수하물처리시스템 등 일부 준비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개항당일까지 완벽한 보완과 준비를 통해 개항 및 정상적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수하물처리시스템(BHS) 증설

시간당 수하물 처리속도가 느린데다 분류·판독 등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시험운영과정에서 성능이 향상되고 있어 개항까지는 시간당 설계용량인 600개까지 늘리는 데 문제가 없다. 성수기까지 900개로 늘리는 문제는 용량증설과 도심터미널 기능향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수하물의 분류 및 판독율은 시험운영을 거듭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안개일수 김포공항의 절반 수준

최근 10년간 인천공항의 안개일수를 측정한 결과 가시거리 200m 이하인 날은 연간 15.7일로 김포의 26.2일보다 적고, 가시거리 1000m 이하인 날은 김포 72일의 절반인 36일로 나타났다. 최근의 잦은 안개는 30년 만에 찾아온 폭설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은 시정거리 200m만 되면 이착륙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으며, 2-3년 내에 시정거리 50m에서 이착륙 가능한 Cat-Ⅲb 등급으로 향상할 계획이므로 안개는 공항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공항접근로 추가

현재의 고속도로가 왕복 6~10차선인만큼 도로 전체가 불통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간별 유고상황 및 사고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해 도속도로 양쪽에 2.5m의 갓길을 확보해 두고 있다. 인천지역 이용객을 위해서는 선박편을 정기항로로 개설했고 장기적으로 인천공항과 연안부두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 건설, 서울역과 공항을 연결하는 전용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배후지원단지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지조성사업이 다소 지연됐으나 현재 3618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으며 2002년 상반기까지는 2000세대의 입주가 가능하다. 공항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중교통 및 자체통근버스를 위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언론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총리실 업무평가' 반발에 대한 입장

중복평가 줄여 효율·책임성 확보
지자체 개별보다 자체평가 우선

국무총리실이 지난 6일자 관보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정부평가가 총리실·행정자치부 등으로 중복돼 혼란이 우려된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가 지난 1월 8일 공포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은 현재의 각종 평가가 중복으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 등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업무의 평가체제 개선을 통해 평가부담을 줄여주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있다.

지난 6일 입법예고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시행령'은 평가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평가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거 운영돼 오던 지자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통합 운영해 평가부담을 줄이는 내용과 자체평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시행될 평가기본법에 따르면 이제까지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적인 평가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해 혁신해 나가는 자체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3개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평가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평가부담 및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기본법에 따라 매우 한정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평가대상사무는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책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행자부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또 평가방법의 경우 목적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합동평가를 제도화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평가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제 평가운영에 있어서도 통제적 요소가 아닌 인센티브 부여, 수범사례 확산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본법의 요지는 범정부 차원에서 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경우 행자부가 관련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합동평가관제 및 평가계획을 보고하면 총리실이 이를 심의해 행자부가 주관해 합동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이들 제도를 지원 조정함으로써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고 피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역할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카지노 시설'에 대한 입장

외국관광객 유치위해 규제 개선
일부호텔 기대감 자체추진 확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지노 시설 사전 준비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99년 1월 관광진흥법 개정은 관광정책차원에서 공청회와 여론을 토대로 정부안이 결정된 것이며 일부언론에서 제시한 특정업체와의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확대경

당시 동법 개정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여행신고제 폐지 등 30여개 관계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관련단체의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관계부처의 협의·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이중에는 특2등급 호텔과 국제회의 시설의 카지노 허용, 외국인투자 조건부 허가 등 카지노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 내에도 카지노를 허용토록 한 것은 제주도 등의 요구와 관광산업에 대한 세계적 조류를 감안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었다.

서울·부산 등 시중의 특1등급호텔 카지노시설의 사전준비는 오랫동안 신규허가가 묶여있던 호텔들이 관광진흥법상 외래관광객이 늘어 카지노 추가허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로 일부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전준비는 최근언론에서 거론된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등에서도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을 기대하고 호텔의 사업적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신규허가방침에 대해 이를 계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규허가 추진여부를 결정한 바가 없으며 업계로부터 신규허가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사전내락 또는 언질을 준바가 없음을 밝힌다.

(문화관광부 공보관실)

"통상기능 산자부로 넘겨야"

"능동적 통상업무 필요" 와전된 듯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덕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최근 사석에서 "통상업무의 90%는 산업자원부가 가져가는 게 옳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한 대사는 최근 신국환 산자부장관과의 조찬 자리에서 "외교통상부가 다자간 협상이나 아·태경제협력체,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회의·기구를 관장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 외에 통상업무의 90%는 산자부가 가져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 신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직원조회에서 전했다.

〈3월5일자, 연합뉴스〉

통상업무의 90%는 산업자원부가 가져가는 게 옳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직원조회에서 한덕수 OECD대사가 "통상업무의 90%가 산업자원부와 관련이 있음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현재보다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도내용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날 신 장관이 발언한 것은 통상업무는 수출·수입·투자 등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가 더욱 적극적인 통상진흥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와 국익차원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분명히 밝힌다. (산업자원부 공보담당관실)

건축·보건·환경 하급직도 재산공개

공개와 무관… 등록 의무만 부과

앞으로 금융감독원 국장급이상 간부들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또 하급직 공무원의 비리가 잦은 건축·건설·보건위생·환경분야 공무원들과 법무부·검찰청소속 마약수사 공무원들은 5급 이하 직원들까지 매년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3월7일자, 문화일보〉

금융감독원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건축·건설·보건위생·환경분야 등의 하급직 공무원들도 매년 재산내역을 공개토록 입안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건축·건설·보건위생·환경·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토록 한 것이지 재산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행정자치부 윤리담당관실)

국정만평 박상익

김대통령 방미 성과

"한국 투자하기 좋은 나라" 세일즈 외교

4대 개혁 성과 자세히 소개
한·미 대북정책 시각차 좁혀

김대중 대통령의 5박6일간 미국방문은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대북정책 및 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 '성공작'이라는 평가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8일 새벽(한국시간) 정상회담에서 "안보·정치·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해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제네바합의 유지 재확인

◆**공동발표문**:공동발표문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 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했으며,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양국간,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유지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발표문은 또 양 정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난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나 대북 경수로와 관련한 일부 논란에 대해서도 양국은 세계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량 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지지하고 양자 통상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합의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을 지지했다.

◆**기자간담회**:지난 8일 아시아 지도자로는 처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김 대통령은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문제와 경제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이해를 깊게 한 유익한 기회였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와 이야기한 결과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정책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주도를 성원한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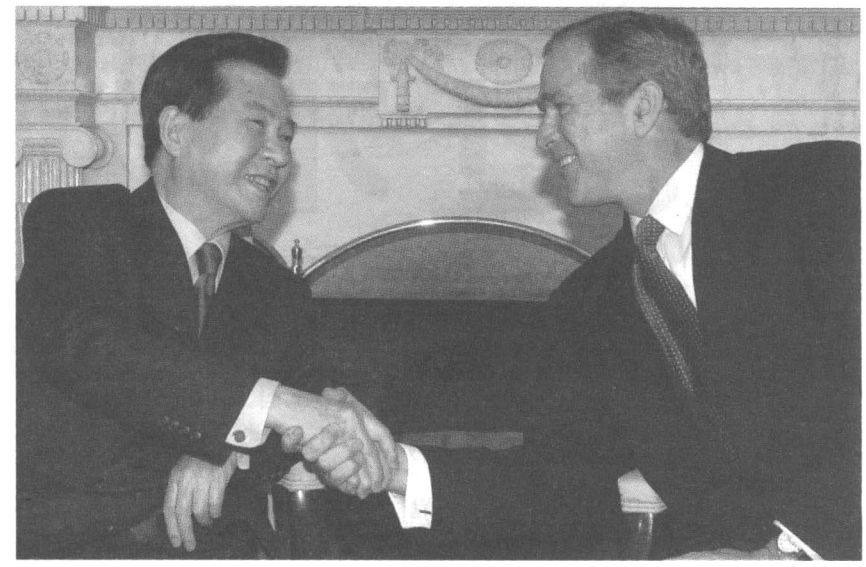
김 대통령은 이어 "다만 북미 관계는 부시 행정부가 겨우 검토를 시작했을 뿐이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미국의 정책 개발과 더불어 한미 양국이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세일즈외교**: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경제인을 상대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김 대통령은 10일 미국 중부위원회와 시카고 외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연설회에서 한국의 경제개혁 현황과 비전을 설명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과정 및 4대 개혁 추진상황을 상세히 소개한 뒤 "한국의 개혁과정은 외국기업 입장에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서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을 벌였다.

김 대통령은 또 "한국정부는 건전한 투자와 교역에 방해가 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환경도 대폭 개선하는 한편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햇볕정책 "지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전날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문제와 경제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이해를 깊게 한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부시 행정부와 이야기한 결과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증진정책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주도를 성원한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회·학계와도 의견 교환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조지 라이언 일리노이주 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국인들은 이 지역기업의 대한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시카고 경제인연합회가 대한 투자시찰단을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종합**:김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는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 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양국 정상이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양국간, 한·미·일 3국간 공조유지의 중요성을 동의한 것은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동시에 앞으로 흔들림없는 대북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된다는 의미깊은 대목이다.

외교전문가들은 또 한·러 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됐던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이 세계 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수준에서 해소된 점 또한 방미 성과라는 결론이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학계·경제계 등 미국 각계 각층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호른스트 쾰러 IMF총재, 제임스 올펜손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 미국 경제각료 등을 잇따라 면담, 우리 정부의 경제개혁 노력과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하고 미국경제인들을 상대로 한 활발한 경제외교 통해 한미기업인협의회를 구성키로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선주기자〉

한·미정상 공동발표문 전문

금일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50여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번영 및 민주주의를 증진해온 한·미 안보동맹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안보·정치·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 정상은 남북한간 화해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지속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 문제해결에 있어서 김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기로 하였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 양국간,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 유지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김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세계 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대량살상 무기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들에 관하여 동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간 경제·통상 관계가 보다 성숙하고 상호 유익하게 발전되고 있는 데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지지하고 양자 통상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을 지지하였다. ■

'동북아 관문' 인천 국제공항

반경 1000km이내 인구 10억명 중간 기착지 없이 전세계 운항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우뚝 서겠다는 대망을 안고 지난 1992년 착공된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29일 0시 30분 미국 LA행 대한항공 화물기의 이륙과 함께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선다. 최근 수하물처리시스템 장애와 접근 교통로 및 배후시설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개항 후 큰 혼잡이 예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항은 물론 시설운영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입장이다. 개항 17일을 앞둔 인천국제공항의 개요와 기능, 현안문제 해결방안, 개항 후 이용방법 등을 알아본다.

오는 29일 개항과 함께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전경.

12일 현재, D-17일.

새 인천상륙작전이 공중에서 시작된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40㎞ 떨어진 인천시 바다에 총면적 1400ha, 4000m급 활주로 2본의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29일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92년부터 공사에 착수, 9년여만에 1단계공사를 마무리지음으로써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서의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산업의 부가가치가 크다는 점과 이번 개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항 주변에 위락단지 · 업무단지 · 물류기지 등이 동시에 입지하는 미래형 복합 거점도시로 육성됨에 따라 항공산업 뿐 아니라 관광 · 수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비행거리 3시간 30분(반경 1000㎞) 이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43개, 거주인구는 약 10억명에 육박하는 등 동북아 교통망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경쟁공항에 비해 여객 및 화물수용능력을 비롯해 부지 · 활주로 · 여객터미널 등의 규모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은 대륙간 항공노선의 최전방에 위치, 미국의 동부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중간 기착지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

또 기존 김포공항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피해 때문에 심야시간대의 항공기 이 · 착륙이 금지된 데 비해 인천공항은 활주로 양 끝 10㎞ 이상이 바다로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우려가 전혀 없어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부지 세계 최대… 여객 한해 1억명 출입 가능

이렇듯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서 다른 경쟁 공항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170만톤으로 개항 첫해에만 LA공항과 같은 세계 6위의 처리규모를 자랑하게 된다. 여객처리는 연간 2700만명으로 출발, 2020년에는 1억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세계 어느 공항보다도 큰 규모이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의 경우 길이 1069m에 폭 149m의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총 연면적이 49만 6000㎡(15만평)에 달해 단일 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해상공항임을 고려해 배의 형상과 우리나라 전통의 곡선미를 최대한 살려 그 우아함이 아주 빼어나다.

항공기 탑승과 관련해서는 270개의 체크인 카운터(국제선 252, 국내선 18)에 60개의 환승카운터, 25개의 수하물 수취대, 64개의 발권카운터, 44개의 탑승구가 마련돼 있으며 입출국 심사대가 각각 120개씩 설치되어 있고, 66개의 세관검색대 등이 설치돼 있다.

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7곳의 안내카운터와 3개의 의무실, 4개의 유아실 및 2개의 종교실을 마련했으며 4곳의 면세점을 비롯한 은행 · 비즈니스센터 · 정보통신센터 · 편의점 등 각종 서비스의 상업시설을 갖췄다.

인천공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설로 여객터미널 앞에 위치한 항공기와 새를 형상화한 모양의 교통센터.

이 교통센터는 지상 2층, 지하3층의 연면적 24만9896㎡(7만5593평)인 대형 건물로 오는 2005년 완공될 공항철도의 역사와 대합실 및 5000여대 규모의 주차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여객터미널과 국제업무단지와 PMS(People Mover System)를 이용해 연결된다. 주차능력은 교통센터의 5000여대를 비롯해 장기주차장 5924대, 화물차 지역 3683대, 기타 지역 780대 등 총 1만5600대이다.

주변에 위락 · 업무단지 조성 미래형 복합 거점 도시 육성

화물처리 연간 170여만톤 개항 첫해 LA공항 맞먹어

국정신문, 생활정보 크게 늘려

4월23일자부터 50% 증면 12면 발행

주간 8면 발행체제를 유지해오던 국정신문이 오는 4월23일자 624호부터 4개면을 증면, 주간 12면 체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는 늘어나는 정부정보와 독자여러분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키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정신문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국정정보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담당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섹션체제를 도입, 기존의 국정정보면에 정부 부처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활정보를 담는 섹션과 미디어섹션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국정신문은 앞으로도

새 제호 공모 상금 20만원 … 3월30일 마감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요구하는 담아내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혁신계획에 따라 독자여러분들의 '국정신문' 제호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1992년 창간이래 정부의 대표매체로 현재의 제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과 새 제호 및 제호설명 등을 적어 관제엽서를 사용해 보내주시면 심사를 거쳐 우수작 1편에 대해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마감은 3월30일까지이며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정신문 앞으로 보내주시면 4월9일자 신문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동북아 중심축

항공노선 이점

고속도 왕복 8차선 … 김포 20분거리

현장스케치

전직원 시스템 시험운영 한창
터미널 중앙 인공폭포 "볼만"
미니호텔·각종 위락시설 갖춰

지난 8일 오후 1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지점에서부터 시속 80㎞로 막힘없이 20분을 달려 방화대교에 다다르자 신공항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였다. 지난해 11월 개통된 신공항고속도로는 인천 월미도와 율도에서 배편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인천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로이기 때문에 개항 후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왕복 8차선으로 시원스럽게 뚫려있고 차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는 한 큰 교통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까지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 전국 지방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한 내국인이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20분이면 다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의 최대 자랑거리인 여객터미널이 시야에 들어오자 공항 주변 정리가 한창임을 알 수 있었다. 주변 곳곳에는 호텔과 오피스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중이라 강한 바람을 타고 흙먼지가 날리기도 했다.

반면 공항 여객터미널 내부는 모든 시설이 완비돼 있는 상태였고, 이날부터 주간단위로 실시되는 공항 전체시스템 시험운영 등으로 전직원이 실제와 똑같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 지하 1층 상가와 지상 1층에는 편의시설이 일부 들어서 손님맞이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탑승구 등 통행로를 제외한 여객터미널 전바닥이 목재로 마무리돼 있어 공항이용객들의 피로도를 최소화시키고, 터미널 중앙의 소나무 숲과 인공폭포 등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내부 모든 곳이 최첨단을 자랑하고 있어 국제공항으로는 손색이 없었다. 또 고유 업무인 항공운송 뿐만 아니라 공항내에서 비즈니스와 레저·쇼핑·숙박까지 가능해 각종 시설면에서 김포공항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선 1층과 3층에는 입출국자들과 환영객들을 위한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면세점 규모도 김포공항의 3배에 이르고 어린이놀이방·유아휴게실은 물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리프트 등도 갖춰져 있다. 2층에는 80평 규모의 비즈니스 센터 두 곳과 30평 크기의 정보통신센터, 8개의 회의실이 마련돼 있고 인터넷은 물론 화상회의까지도 가능해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비즈니스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4층에는 에어가든이라는 객실 90개 규모의 미니호텔과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다. 미니호텔은 6시간 단위로 숙박이 가능하며 이벤트룸과 라운지바, 전문식당가, 오락실, 비디오룸도 마련돼 있었다.

다만 교통센터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승용차를 이용한 공항이용객들이 주차장에 차량을 두고 여객터미널을 들어설 경우 올 상반기까지는 주차장과 여객터미널을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다소 따를 것으로 보였다.

공항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항공사 근로자와 공항직원들이 각자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온 개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선경철기자〉

한편 현재 건설된 제 1·2 활주로는 길이 3750m, 폭 84m, 포장두께 105㎝로 현재 개발중인 600명 탑승규모의 A-380시리즈급(최대 이륙중량 590톤) 초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다. 특히 인천공항의 활주로 운용방식은 항공기 결항률(연간 0.48%)은 최대한 낮추고 안전성은 높인 정밀 시스템으로 시정거리 200m만 확보되면 어떠한 악천후에서도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CAT-Ⅲa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개항 2~3년 내에 시정거리 50m만 확보돼도 이·착륙이 가능한 CAT-Ⅲb방식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동북아 지역 주요 경쟁공항 비교

※( ) 안은 최종단계

구 분	인천공항	일본 간사이	홍콩 첵랩콕	중국 푸동(상해)
부지면적(만평)	355(2,700)	155(393)	378(450)	287(969)
활주로(개)	2(4)	1(3)	1(2)	1(4)
여객터미널(천평)	150(338)	91(183)	66(270)	85(240)
화물터미널(천평)	60(244)	56	90(530)	85(240)
운항회수(만회/년)	17(53)	16(26)	16(32)	12(32)
여객처리(만명/년)	2,700(1억)	2,500(4,000)	3,500(8,700)	2,000(7,000)
화물처리(만톤/년)	170(700)	139(175)	300(900)	75(500)
건설기간	92~2000(2020)	86~94.9	91~98.4	95~2000
공항시설 사업비	7조8079억원 (65억USD)	약 30조원 (250억USD)	약 24조원 (99억USD)	약 2조원 (15억USD)
개항년도	2001.3	1994.9	1998.7	1999.10

이용방법

방화대교에서 공항 고속도 진입 승용차
19개 도시 43개 노선 이달내 운행 버 스

◆ 접근

△ 승용차 이용의 경우: 서울에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한강변의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거쳐 인천공항고속도로 기점인 방화대교까지 와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진입한다.

인천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시내의 남북연결도로를 통해 북인천 IC까지 간 다음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수원 등 수도권 남부에서 접근할 경우에는 외곽순환도로의 노오지 JC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진입하고 고양 등 수도권 북부의 경우 외곽순환도로의 신평 JC를 통해 진입하거나 김포공항 IC 또는 강변북로의 육갑문(방화대교를 지나 1Km 지점에서 U턴)을 통해 인천고속도로에 진입한다.

△ 버스 이용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19개 도시에 43개 노선을 3월중 운행할 예정이다.

△ 기타: 인천의 율도부도나 월미도 선착장에서 선박을 이용해 영종뱃터까지 온 후 영종뱃터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다.

△ 비행기 이용: 국내선 이용시에는 인천공항까지 국내선 항공기가 운항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이용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김포공항까지 와서 김포공항~인천공항간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출입국 수속

△ 출국 경우: 출국장소는 여객터미널 3층에 있고 입국자 환영홀은 2층에 있다.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여객터미널내 3층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포함해 체크인 후 보안검색과 세관검색을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간다. 그후 탑승라운지로 이동해 탑승시간이 되면 2층에 있는 고정탑승교로 내려가 탑승교에 대기하고 있는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 입국 경우 : 비행기가 2층 탑승교에 도착하면 탑승교에서 내려 검역(필요시), 입국심사를 마친 후 1층으로 내려와 수하물을 찾아 세관 검사를 마치고 1층 환영홀로 이동하면 된다.

△ 수하물처리: 여행자의 기내소지 휴대품의 크기가 제한된다. 휴대품의 크기는 가로·세로·폭 등 3면을 모두 합친 길이가 115㎝ 미만이어야 하며 무게는 10㎏ 이하이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내 곳곳에 '테스트 유니트'를 설치해 여행자들이 기내반입 수하물의 크기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직사각형 모양의 이 유니트에 가방을 넣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 항공사에 맡기면 된다.

맡겨진 가방은 수하물처리시설(BHS)을 통해 여행자가 탑승하는 항공기로 자동 이송된다.

인천공항의 BHS는 김포공항과는 달리 바코드에 의해 자동분류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홍영모·최 강기자〉

산불방지 계절없고 산불감시 너나없다

입 법 예 고 〈3월 3일 ~ 8일〉

집단위락지 준도시 입안 가능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준도시지역으로 입안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안에 집단취락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입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02)504-9121)

공무원 관세사시험 2과목 면제

△관세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관세행정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해 관세사 2차 시험과목 중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과목을 면제했다. 또 관세사시험 일부 면제대상자의 보직을 종전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통관관련 근무부서로 제한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다른 자격사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사 시험응시 수수료를 2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통관취급법인의 육상운송기준을 화물자동차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02)503-9231)

어선 기관사 승선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어선원 등의 생산수단 ·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기관사 등 직원을 추가했다.

또 시설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부금 전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범위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한국수양부모협회 등을 추가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2)503-9214)

5급이하 재산등록 분야 확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5급 이하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는 특정분야를 건축 · 건설 · 보건위생 · 환경분야로 확대하고,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공무원 중 마약수사직렬을 추가하며 금융감독원의 국장급 이상 직원에게도 등록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자치부 윤리담당관실:02)3703-4470)

중앙인사위 · 금감위 기관 평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중앙행정기관 평가의 대상기관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중 중앙인사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포함시켰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계획을 수립해 당해 연도 3월1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합동평가 실시여부를 행정자치부 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1심의관실:02)730-4325)

채권발행 종금사 '신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채권을 발행하면서 공시서류인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됐던 종합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앞으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전자 장외거래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거래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3%(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1%) 이내로 정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02)500-5363)

다목적댐 부대시설 '투자' 산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국가가 다목적댐의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을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 · 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산정토록 했다. 또 지자체장의 대집행권한을 공사에 위탁함을 명시하고 공사는 대집행시 집행계획을 계고일 7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02)500-4077)

전기통신업 외국인의제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과 관련해 외국인 등이 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 등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만을 외국인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에 이동전화서비스와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포함했다.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선납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전기통신 설비와 기술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02)750-1313)

〈홍영모기자〉

외국 언론이 보는 한국 · 한국인

저소득층 지원 복지국가 기반 다져
미국은 북한약속 증명 되면 도와야

ESM

CT

■『한국의 경제안정은 아시아 경제발전의 견인차』
(4일자, 멕시코 · 엘 솔 멕시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안정을 위해 4대부문에 걸친 과감한 국정개혁을 추진,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연대 이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했다.

김 대통령은 2001년도에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활력 회복, 생산적 복지기반 확충등으로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화 등과 같은 주요시책들을 중점 추진중이다.

한국 정부는 생산적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이미 시행,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등 선진 복지국가 진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특히 김대통령은 취임이후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쟁재발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6 · 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남북간 각급 회담의 정례화, 다양화를 통해 신뢰회복을 다졌다. 또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경의선복원 착공 등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들을 이뤄냈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남북선수단이 공동입장 하는 쾌거를 올렸다.

현재 남북 관계는 과거에 비하여 매우 호전되었으며, 김 대통령은 북한의 개방촉진을 위하여 북한을 한국의 우방국과 관계개선은 물론 지역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고립 탈피 유도』
(7일자,미국 · 시카고 트리뷴)

북한에 대한 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한국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수요일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포함한 5일간의 시카고, 워싱턴 방문차 미국에 왔다. 김대통령은 현명한 '햇볕정책'을 추진해 한국전쟁이래 남북화해의 가장 희망적인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고 비무장지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와 철도가 건설중이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그의 아버지인 전 부시 대통령이 주장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불량국가로서의 북한의 존재를 이용하고 있다.

공화당의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일부 미국 하원의원들은 최근 북한정부에게 두개의 핵 원자로를 제공한다는 이전의 미국 약속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것이 제공되면 무기용 플로티늄을 생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1994년 북한은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석유 공급과 두개의 핵 발전소 건설지원을 약속하는 '기본 합의'에 동의한 바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북한의 약속이 증명될 수 있는 한 그 합의내용을 지켜야 한다.

북한은 가장 예측이 어렵고 호전적이고 위험스러운 나라다. 남한에 주둔한 미군부대가 그렇듯이 부시는 북한과의 어떠한 잘못된 조치도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포용정책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물론 부시는 북한을 잃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보훈문화 확산 방향설정

남북 독립운동 사적지 교차방문

유공자 행적 · 묘소위치 인터넷 담아

정부는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맞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이버 민족정기선양센터 운영 등 다양한 보훈문화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해 올해를 '보훈문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남북화해 · 협력시대에 부합한 보훈정책 구현 △생산적 복지와 연계된 보훈복지 시책 전개 △민족정기 선양을 통한 보훈문화 저변 확산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보훈행정체계 확산 등을 사업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맞아 새 보훈이념을 정립키 위해 광복이전에 활약한 독립운동가의 발굴연구 및 남북한 상호연관 사적지에 대한 교차방문 및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학술회의 등을 남북한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오는 6월 인터넷에 민족정기선양 센터를 개설, 특히 1945년 이전에 활동한 정부 포상 독립유공자 8855명에 대한 행적과 묘소위치, 관련기념공원 등을 담고, 현충일 · 광복절 행사 등을 인터넷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 참배소 · 기념식장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애국심함양 사이트 개설

또 애국심함양을 위한 청소년 사이트 개설, 사이버 취업 · 법률상담소 설치, 전우찾기 등 만남의 장 등을 누구나 인터넷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모든 연수원 교과과정에 '민족정기선양' 과목을 개설하고, 어린 학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교실, 대학생 국내외사적지 순방, 교원대상 민족정기선양 교육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보훈문화 저변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3 · 1운동 재현행사 및 기념식전후 이벤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한편 보훈가족들의 능력과 재능 개발 및 기술교육 등을 통해 평생직업을 취득토록 하는 등 생산적 복지에 근거한 보훈시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장대섭 과장은 "보훈행정 40년이 되는 올해를 '보훈문화 확산의 해'로 정한 것은 우리의 당면과제인 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국민의식의 동질성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대립과 갈등, 집단이기주의, 윤리도덕의 상실 등의 병폐를 보훈정신의 생활화를 통해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뤄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주기자〉

K-TV 볼만한 프로그램

IT분야 교육 · 취업대책 조명

■ K-TV집중조명
인적자원 개발정책
16일(금) 오후 2시 20분

사회 각 분야의 효율적 인력양성과 관리를 목표로 출범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 1개월을 맞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과 조직, 기초학력 · 전문직업교육 등 분야별 청사진, IT분야 교육과 취업대책 등에 대해 중점 조명한다.

인천신공항 중요성 집중분석

■ 정책 Q&A
동북아 허브공항
14일(수) 오후2시 20분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인천 신공항의 중요성과 경제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인천공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 및 개선책을 모색해 본다.

베를린선언의 의의 · 과제 진단

■ 세미나 중계실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16일(금) 낮 12시 10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베를린선언의 취지를 되살려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보는 시간.

주제발표로는 베를린선언의 의의와 과제(손기웅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베를린선언 이후 남북경협의 성과와 과제(임강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베를린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유호열 고대 교수) 등이 진행된다.

토론자로 박기간 교수(경희대 아 · 태지역연구원), 김영배 논설위원(중앙일보), 박성훈 상근위원(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등이 출연한다. ■

정부인사

〈3월5일 ~ 9일〉 * ( )안은 전직

◆**재정경제부 5급 전보**▷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채광률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 임현종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차영봉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 김동엽

◆**행정자치부 과장급 전보** ▷방재관 이종팔(재난관리과장) ▷감사담당관 정병일(세정과장) ▷행정정보화담당관 예창근 ▷인사과장 김병선(고시과장) ▷고시과장 김윤동(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3과장) ▷행정제도과장 박락조 ▷행정능률과장 오동호(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사무국장) ▷자치행정과장 이종배(재정경제과장) ▷민간협력과장 김병률(민방위기획과장) ▷실업대책과장 하재룡(행정정보화담당관) ▷재정경제과장 이삼휴(감사담당관)▷교부세과장 한봉기 ▷세정과장 김정진(행정능률과장) ▷재난관리과장 서종진(재난관리과)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과장 손육래(청사관리소 시설과장) ▷정부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감종훈(과천청사관리소 기술과장) ▷정부기록보존소 행정과장 신진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총괄과장 임채호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사무국장 유재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김일재

◆**산업자원부 5급 전보**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이성천(자원정책실 에너지안전과) ▷산업정책국 전자상거래지원과 김영표 4급 승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디자인브랜드과 서관영

◆**환경부 국장전보** ▷수질보전국장 윤성규(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장) 서기관 전보 ▷환경정책국 국토환경보전과장 신원우(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장)▷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장 정연만(환경정책국 국토환경보전과장)▷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장 김용진(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기획예산처 국장급 전보** ▷재정기획국장 배철호(예산관리국장)▷예산관리국장 박인철(정부개혁실 재정개혁단장) ▷공보관 류덕상 ▷기획예산처 김동환(공보관)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전보** ▷정책국 제도개선과 김의환(정책국 국제업무1과) 5급 임용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2담당관실 조영창 ▷독점국 기업집단과 김근성▷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 배현정 5급 전보 ▷정책국 국제업무1과 신상훈(정책국 국제업무2과) ▷정책국 국제업무2과 이형주(정책국 제도개선과) ■

정부청사 게시판

국제교류 희망 청소년 모집

문화관광부

2001년도 정부간 청소년 국제교류(국외파견) 프로그램 참가희망자를 8월18일까지 파견국가별로 공개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만 15~24세의 모든 청소년들과 만 18~29세 통역요원, 우정의 계획은 연령에 관계없이 예능계 재학중인 대학생과 만 18~35세의 사무직 근로 청소년 및 청년이다.

선발청소년들에게는 편도항공표 및 파견국에서의 숙식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며 생활보호대상 청소년 · 일본참가 청소년 · 통역요원에게는 항공료 등 일체의 경비가 무료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ct.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3704-9920

초등생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달부터 7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가방 없는 날 및 체험학습의 날과 연계해 우리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을 실시한다.

신청은 학교별 · 학년별(초등학교 3년 이상 150명 내외)로 받으며 교육내용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문강사를 초빙해 봉산탈춤 · 민요 · 택견 등 전통문화배우기와 민속공예품만들기, 전시실관람으로 구성된다.

문의 02)734-1341

보훈표어 · 호국문예작품 공모

국가보훈처

6 · 25전쟁 51주년과 국가보훈처 창설 40주년을 맞아 보훈관련 그림 · 보훈표어 및 호국문예작품을 전국민(초등부, 중 · 고등부, 일반부)대상으로 공모한다.

민족정기 선양 및 호국 · 안보의식 함양과 전적지 등 견학관련 내용으로 그림(포스터 포함)은 2절 또는 4절 크기로 시는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수필은 원고지 20매 내외분량이다.

마감은 그림 3월31일까지, 시 · 수필 · 참전수기 4월25일까지이며 각지방 보훈청으로 응모하면 된다. 단 참전수기 부문은 전공담 · 무용 담, 전우애 등을 담은 내용 등으로 분량은 원고지 100매 내외로 6 · 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에 한한다.

문의 02)782-9508

주부 세금수기 공모

국 세 청

주부 세금수기를 현상 공모한다. 수기의 주제는 나라살림에 있어 세금이 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 등을 일깨우는 내용, 성실한 납세의 소중함과 납세도의심을 높이는 내용, 기타 세금과 관련한 자기의 경험 및 소감 등이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이다.

응모기간은 3월19일 ~ 4월30일까지이며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 397-1397

〈최 강기자〉

황사와 싸우는 기상청 — 클로즈 업

"기상도와 무관 비 예보보다 어려워"

벌써 네차례…예년보다 잦을 듯 분석인원 늘려 피해 최소화 노력

잦은 폭설과 강한 바람 등으로 겨울내내 비상근무에 들어갔던 기상청 직원들이 이번에는 3, 4월에 집중되는 황사현상을 잡아내기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황사현상이 이미 네 차례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자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황사를 타고 구제역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기상청에는 황사와의 전쟁이라도 벌일 듯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3월7일 오후 2시 55분, 기상청 2층 50여평 규모의 예보실 좌측벽에는 슈퍼컴퓨터가 수시로 토해내는 수십 종류의 일기도가 부착돼 있고, 일부 직원들은 일기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피할수 없는 종합 브리핑

오후 3시, 예보국 직원들의 하루 일과 중 가장 곤혹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종합브리핑이 시작됐다. 하루 5차례(오전 5.9.11시, 오후 5.11시) 기상예보를 내는 기상청이 의견을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이날 관심사는 역시 황사.

"위성관측에 따르면 동해상 쪽으로 황사현상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지상관측과 비교적 잘 맞고 있습니다."(위성관측 담당자)

"다행히 5일전 시작됐던 황사주의보를 오늘 저녁을 기점으로 해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니 예의주시하기 바랍니다."(홍사선 예보국장)

몇몇 직원들이 우려했던 피해없이 황사가 물러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다.

"해상면에 바람은 그대로 살리도록 하세요. 호남은 '구름한때 눈', 충청은 '오후 구름',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낮 최고 영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보국장이 총괄예보관의 단기예보 브리핑을 듣고 기온변화 경향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언함으로써 40분간의 종합브리핑이 정리됐다.

황사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기상청은 분석인력을 보강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덕분에 기상청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사실.

예전에는 여름 호우(6.15~10.15)와 겨울 폭설(11.15~3.15)에 대비한 재난대책기간에 바짝 긴장하면 됐는데, 지금은 황사 때문에 숨 돌릴 틈이 없다고 토로한다.

"황사관측은 주로 육안과 위성 등 두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황사는 지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수예보보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진기범 예보관)

예보관들은 황사 이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야만 각종 농작물 피해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황사에 대한 기상청 예보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황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사막지역을 녹화하는 것이지만 단기간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발생국인 중국과의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국민 자신이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황사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김성균 공보담당)

지난 7일 기상청 예보실에서 30여명의 예보관련 직원들이 모여 종합브리핑을 갖고 있다.

슈퍼컴퓨터를 비롯 각종 정보통신기기가 도입됨에 따라 기상청이 최첨단화되고 있지만, 이처럼 기상예보의 최종판단은 예나 지금이나 예보관들의 몫이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렵다. 특히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구름의 형태로 보아 비가 올것인가 등은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된 예보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변화경향·경험 살려 판정

지난 99년 12월 슈퍼컴퓨터가 도입된 이후 주로 하루단위로 발표되던 기상예보를 6시간 단위로 예보할 수 있을 만큼 선행시간이 앞당겨지고, 예보 정확도도 향상됐다.

하지만 모든 기상예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예보관들은 최종예보문을 내놓고도 수시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오늘 비 온다고 해서 우산 들고 나갔더니 하늘만 맑더라"는 항의전화라도 받으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기상청 직원들은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 도입 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노후된 관측장비 교체 및 전문인력 양성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오늘 기상예보가 설령 틀릴지라도 항상 대비하려는 국민정서도 같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고 지적했다. 〈선경철기자〉

외출땐 마스크 집에 오면 양치질 방목가축은 축사로 대피시켜야

피해 이렇게 줄인다

황사 =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나 황하 중류 황토지대에서 발생, 바람을 타고 상승한 뒤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까지 날아오는 흙먼지를 말한다. 황사는 호흡기 및 안과 질환을 유발하고 식물의 기공을 막아 광합성을 방해해 생육을 저해하며, 고도의 청정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반도체장비 등 정밀기계와 항공기 엔진을 망가뜨리는 등 산업피해도 크다.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기관지천식,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황사피해를 줄이는 방법 = 황사가 발생하면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염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부득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미지근한 물에 손발과 콧속을 깨끗이 씻어내고 양치질을 하는 등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농촌에선 = 농림부는 구제역 유입경로의 하나로 의심되는 황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 등에 특별관리를 당부했다. 방목하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가능한 한 축사의 창·출입문을 닫도록 했다. 또 건초· 볏짚 등 조사료를 천막 등으로 차단하고 황사가 지나간 뒤에는 가축은 물론 축사 주변 및 건물 내외부·사료통 등을 물로 씻고 소독하도록 당부했다.

황사방지대책 = 무엇보다 황사발생지역의 녹화사업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황사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도를 높여 중국, 일본과 함께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사막 부근의 생태복원 작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 서부지역 사막화를 막기 위해 3국이 국제협력 조림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